

투데이

아파트 층마다 공동화장실 1곳 50명이 40년간 사용해왔다니…

광주시, 광천동 시민아파트 화장실 개보수키로

38년째 광주시 서구 광천동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모(55)씨는 매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나와 아파트 복도 중간에 있는 공동화장실에서 용변을 본다. 아파트 주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노인들은 가끔 공동화장실을 가는 도중이나 기다리다가 지쳐 '일'을 보기도 한다.

이 아파트 공동화장실 개보수를 위해 현장을 찾은 광주시 건축주택과 직원은 "광주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허를 내들었다.

광주시가 주민 50명이 1곳의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광주시 서구 광천동 한 아파트의 공동화장실을 개보수해 주기로 했다. 소외받는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공간 이라도 최소한의 주거의 질은 확

관심도 없어 주민들은 40여년 넘게 이 같은 고통을 감내해왔다.

이 아파트에 사는 박모(61)씨는 "한국전쟁 당시 광주에 있는 피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급하게 지어진 건물"이라며 "이 아파트만이라도 재건축해 내 화장실에서 편하게 용변을 보고 싶다"고 한탄했다.

광주시는 강 시장의 지시에 따라 국비와 시비 3억6000만원을 마련해 화장실 9곳에 대해 1곳당 약 40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입, 수세식 및 세면장을 갖춘 현대식 시설로 개보수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파트가 비좁아 가구마다 화장실을 설치하기는 어렵지만 공동화장실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장애인 인권침해 시설 4곳 경고

광주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역 내 장애인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감금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시설에 대해 재조사 후 시설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광주시는 9일 "지난 6월21일부터 7월 1일까지 장애인 생활시설 23곳(법인 15곳, 개인 8곳)에 대한 민관합동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해 감금이나 거주 장애인 간 폭행 등이 의심되는 시설 등 4곳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

된 조사팀은 시설 거주 장애인 중 145명을 표본 추출해 의식주 생활시설 전반적인 환경, 문화생활·경제권 등 14개 항목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했으며, 일부 저적장애인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감금, 장애인 간 다툼 등의 사실이 있었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시설 내 위생불량 등 시설장의 복지 인식변화 부족에 따른 문제점도 적혀졌다.

광주시는 이번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2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및 시설장 교체를, 시

설 내 위생불량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재활 및 주거서비스가 부족한 2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해당 자치구에 불법·부당행위 재확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권고했다. 또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처원에서 수시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수사례에 대해서 시, 인권단체, 시설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전 시설에 전파하고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법을 분명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예상하고 10월 말까지 작업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완도항 수질 정화 및 입·출항 선박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거 사업과 함께 완도항 어선 정박시설 축조공사, 마리나항 건설사업을 통해 완도항을 물류 및 수산물 유통, 해양관광레저 거점항만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기기자 dok2000@

전남도, 완도항 해양폐기물 수거한다

90㏊ 해역 481t 추정

전남도는 8일 완도항의 수중 침적 해양 폐기물을 수거해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한국어촌어항협회와 공

동으로 5억2000만원을 들여 완도항 북방파제에서 제 2부두까지 90㏊ 해역을 대상으로 수거 작업에 나서 이 일대 수중 침적 폐기물을 수거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현재 이 일대 침적된 폐기물량이 481t에 이를 것으로

맡았다.

/김자기기자 dok2000@

50년 전통·대를 잇는 한의원

잇몸병 한약 2첩

붓고 시리고 애리고 피날때

북경당 한의원
대인시장 한미쇼핑 및 면편

한의학 박사 박상준

전화 227~7575
이 이 치료 치료

공무원 특별자금

무소득 기부세액 · 100% 대출금액 청탁금지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1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 ~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적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년 5%-7.5%(은행금융권) / 순위 - 월 1.2%-3%

국민금8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①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② 금액 - 3백만~4천만(추가대출가능)

③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④ 기간 - 1년~10년(퇴직기간까지 연장 가능, 본인선택)

⑤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과다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 KBA시세-80%+0 (60%) 금리 : 연 3.93%~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 보증금의-80% 금리 : 연 5.9%~

★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故 안현태 국립묘지 '기습 안장' 반발 확산

5월 단체들 전국 반대운동 조직 결성

안장취소 청구소송 결의

김재균 "청와대 압력 이익"

5공화국 때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낸 고(故)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관련 단체는 법적 소송을 비롯한 전국적 반대운동 조직 결성에 나섰고,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 읍)은 청와대 압력의혹을 제기하며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5·18 기념재단과 5·18 관련 3개 단

체(구속부상자 회, 부상자 회, 유족 회)는 8일 대책회의를 열어 ▲전국적 반대운동 조직 결성 ▲안장결정서류 정보공개 청구 ▲안장결정 취소청구 소송 ▲반민주 인사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 청원 등을 결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10일 국가보훈처를 방문해 안장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12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안현태 뱃머리 현장정중단'을 조성한 것도 모자라 5공 당시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하는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며 "안장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반발하며 사퇴했음에도 안장 결정을 날치기한 배후에는 심의위원들에 대한 청와대의 전화 압력을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와대 압력설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나회 뱃머리 현장정중단을 조성한 것도 모자라 5공 당시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하는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며 "안장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반발하며 사퇴했음에도 안장 결정을 날치기한 배후에는 심의위원들에 대한 청와대의 전화 압력을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와대 압력설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신군부에 맞서 싸웠던 5월 영광을 비롯한 민주 유공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형평성을 잃은 이번 결정이 번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뉴스 브리핑

기능인재 9급 선발 50명으로 확대

농어촌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특성화과와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출신의 우수 인재를 기능 9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기능 인재 선발 규모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기능인재 선발 직렬과 인원을 지난해 6개 직렬 30명에서 올해 10개 직렬 50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 직렬은 기계 6명, 전기 5명, 통신 4명, 건축 3명, 토크과 보건, 농림, 선박항해 각 2명, 선박기관 4명, 정보통신현업 20명이다.

4대강 16개 다기능보 명칭 확정

농어촌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알선 금지

국토부는 임시 명칭을 사용하던 4대강 다기능 보 16곳의 공식 명칭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영산강의 죽산보와 승촌보는 임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16개보의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명이역 특색을 살린 이름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9일 오전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광역시도계획, 도시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도 기후변화 대응 방안과 풍수해 저감 방안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수립 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등 각종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광역시도계획, 도시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도 기후변화 대응 방안과 풍수해 저감 방안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수립 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 방안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수립 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농어촌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알선 금지

국토부는 9일 오전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광역시도계획, 도시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도 기후변화 대응 방안과 풍수해 저감 방안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수립 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농어촌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알선 금지

국토부는 9일 오전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광역시도계획, 도시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도 기후변화 대응 방안과 풍수해 저감 방안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수립 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농어촌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알선 금지

국토부는 9일 오전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광역시도계획, 도시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도 기후변화 대응 방안과 풍수해 저감 방안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수립 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농어촌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알선 금지

국토부는 9일 오전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광역시도계획, 도시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도 기후변화 대응 방안과 풍수해 저감 방안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수립 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농어촌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알선 금지

국토부는 9일 오전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광역시도계획, 도시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도 기후변화 대응 방안과 풍수해 저감 방안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수립 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농어촌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알선 금지

국토부는 9일 오전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광역시도계획, 도시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도 기후변화 대응 방안과 풍수해 저감 방안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수립 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농어촌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알선 금지

국토부는 9일 오전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광역시도계획, 도시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도 기후변화 대응 방안과 풍수해 저감 방안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수립 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농어촌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알선 금지

국토부는 9일 오전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광역시도계획, 도시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도 기후변화 대응 방안과 풍수해 저감 방안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수립 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농어촌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알선 금지

국토부는 9일 오전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